

(엠 바고) 2017.11.2일 15:30

※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11.2일)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7. 11. 2.

관 계 부 처 합 동

### 순 서

I. 추진배경 .....	1
II. 추진방향 .....	5
III. 세부 추진과제 .....	6
1.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6
2.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	16
3.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21
IV. 추진계획 .....	26

## I. 추진배경 : 우리 혁신창업 생태계 현주소

### ①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 '00년 초반 벤처 붐 등 역동적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가 IMF 극복 및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이후 전반적 활력이 저하

\* 주요 도시별 창업 생태계 가치(Startup Genome, '17년, 세계 55개 도시, 10억불) : (실리콘밸리) 264, (베이징) 131, (텔아비브) 22, (싱가폴) 11, (서울) 2.4

- 창업생태계의 활력 저하, 창업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등 역동성 저하로 전통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착화
  - 세계 215개 유니콘기업 중 국내 벤처기업은 2개, 창업을 통한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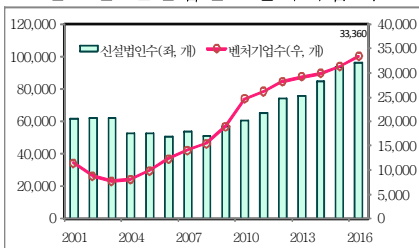
\* 창업형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피터슨연구소, %) : (美) 32.1, (日) 63.0, (韓) 18.5

### ② 창업 양적 확대,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성은 미흡

- 신설법인 수,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들은 지속 상승 추세
-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은 미흡
  - 국내 창업은 생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유럽·미국·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석박사급 등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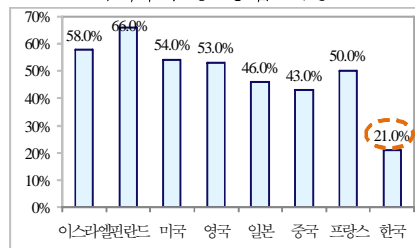
\* 창업자 중 석·박사 비중(14년, 창업 7년내 기업 198만개 기준)은 5.3%에 불과

< 연도별 신설법인·벤처기업 수 >



\* 자료 : 통계청

<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 >



\* 자료 : OECD('14년)

### ③ 주요국에 비해 벤처투자 부족 등 모험자본 역할 미흡

-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등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

\*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15년, %) : (美) 0.33, (中) 0.24('14년 0.11), (韓) 0.13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업당 벤처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투자보다 대출형태의 자금조달에 많이 의존
  - 특히, 제품개발 이후 양산·사업화 등 성장단계(Series B·C)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벤처투자와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에 효율적 자금공급 기능 저하

구 분	창업초기단계		성장단계	
	엔젤/AC	초기VC	일반VC	PE
한 국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20억원	50억원 내외
외 국	Seeding 5억원	Series A 50억원	Series B 150억원	Series C 32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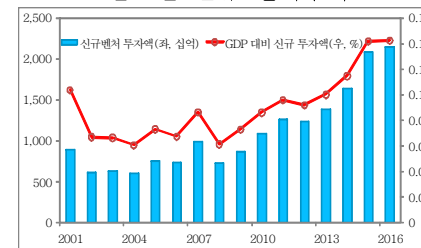
- 벤처투자의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

- 국내 벤처캐피탈의 보통주 투자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고, 상환우선주·회사채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엔젤투자\*, 클라우드펀딩\*\* 등 초기 창업기업 대상의 **신유형** 자금조달 수단도 아직까지 초기단계

\* 엔젤투자 비중(벤처투자+엔젤투자 대비, '15년, %) : (美) 28.8, (英) 29.1, (韓)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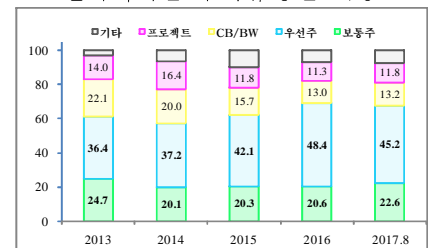
\*\* 클라우드펀딩 '16.1월부터 자금조달 허용, 월평균 발행건수가 12건에 불과

<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 >



\* 자료 : 통계청

< 벤처캐피탈 투자유형별 비중 >



\* 자료 : 벤처캐피탈협회

#### ④ '투자 → 회수', '실패 → 재도전'의 선순환 고리가 취약

○ 코스닥·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로 인해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이 제약

① M&A 등에 대한 기존 대기업·투자자의 인식·참여부족, 제도적 기반 미흡 등으로 관련 시장조성이 여전히 부진\*

\* 벤처투자 회수비중('16년, %) : (美) M&A 94 vs. IPO 6, (韓) M&A 11 vs. IPO 89

② 코스닥시장의 2부 리그화 등 시장기능이 약화

i) 창업 후 코스닥 상장·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코스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도 감소\*\*

\* 창업 후 코스닥시장 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11.4년 소요('16년)

\*\* 코스닥시장 자금조달 규모(조원 IPO+유상증자) : ('99) 4.5 → ('00) 7.1 → ('16) 3.7

ii) 코넥스·K-OTC 등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코넥스	일평균 거래량(억원)	3.9	18.2	24.7	13.1
	신규상장(개)	34	49	50	20
K-OTC	일평균 거래량(억원)	9	9	6.4	6.8
	신규등록(개)	74	30	16	3

○ “창업실패 = 재기불능” 공식이 아직까지 유효, 재도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지속 등 사업실패에 대한 창업자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

\* 폐업기업 대표자 부담(중기부, '17년) : 3.56억원(보증 대위변제 3.09 + 조세채납 0.37 등)

- 정부 정책지원도 창업단계에 집중되고 재도전 지원은 미미

\* '17년 창업·재도전 정책지원 금액(억원) : (창업단계) 5,945 (재도전단계) 213

\*\* 2년 생존율 비교(%) : 창업기업 47.5('14년) vs. 정부지원 재도전기업 83.9('16년)

#### ⑤ 점진적인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불 조성·확산에는 미흡

○ 혁신창업·벤처활성화를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지원 추진

- 부처별·분야별로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마련·시행

\* '17년 계획기준 7개 부처가 6,158억원 규모의 창업지원 정책 수립·시행중 (중기부 5,191억원, 과기정통부 612억원, 특허청 111억원, 교육부 16억원 등)

- 모태펀드 출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공급 확대

\* 모태펀드 정부출자 추이(억원) : (11) 925 ('13) 1,425 ('15) 3,961 ('16) 2,130

- 창조경제혁신센터·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등을 통해 혁신창업 인프라 확충 추진

○ 벤처투자액 증가, 벤처기업 급증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점진적·분절적 정책으로 민간중심의 벤처 불 조성에는 한계

- 그간의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획기적 제도·인센티브 개선 보다는 점진적인 개편 위주

- 각종 진입·행위규제 완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他 정책 수단 활용에는 다소 소홀

\* (예시) 창업투자회사 설립시 과도한 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 요구, 유사한 벤처투자제도가 서로 다른 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음

○ 중국 등은 “大衆創業·萬人革新” 기치 아래 혁신창업\*을 전폭 지원하고, 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창업기반 조성\*\* 노력

\* 북경 중관촌·항주 몽상소진 등 창업기반 확충, 창업기업 각종 세금 대폭 면제 등

\*\* 佛 통신기업 창업자 Niel이 3,300억원을 투자,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설치, 정부도 해외 우수인력 유치, 3,000억원 규모의 지원기금 조성 등에 전력

⇒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창업 국가”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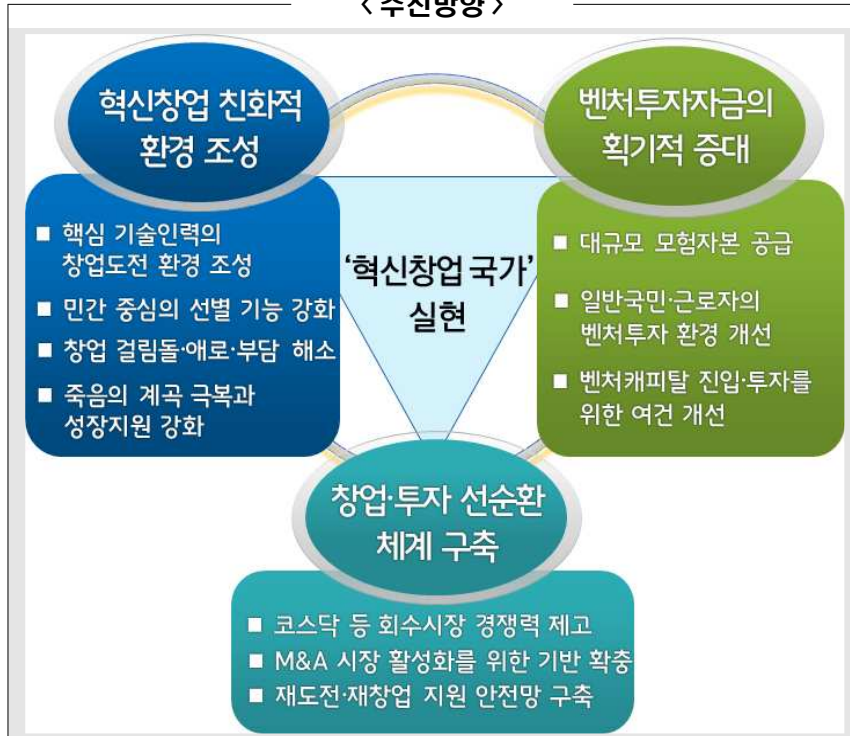
## II. 추진방향

◇ **목표** :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

### ◇ 3대 추진방향

- ① 우수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 ③ 「창업 → 실패 → 재도전」, 「투자 → 회수 → 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 추진방향 >



## III. 세부 추진과제

### 1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기업·대학·출연연구 우수인재들의 **質 높은 창업**을 유도하고,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제2의 벤처창업 봄” 조성

#### ①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 □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활성화

○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 민·관 공동 재원(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20억원)

○ 분사창업 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을 유도 (모기업-정부간 협약)하고, 분사창업기업에도 세제혜택\* 제공

\*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모기업의 적극적인 사내벤처·분사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우대 확대**(1점→2점)
- 분사창업 以前단계에서 **공정위가 사전에 신속 상담**을 실시하여 **대기업집단 편입\***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모기업이 분사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거나, 모기업이 분사기업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되면 편입

**(현장목소리)** “대기업에게 벤처투자는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OO △그룹 상무)  
“대기업 분사기업도 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OO 중견벤처기업 대표)

#### □ 대학·출연 연구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

- 교수·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창업 장려를 위해 **창업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 휴·겸직 가능기간·조건 완화\*** 유도

\*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제정하여 대학 등에 보급·확산

구 분	현 행	주요 개선(案)
대학	교원 평가	일부 대학만 반영
	휴·겸직	교원업적 재임용 평가 반영
출연 연구	정원반영	기관자율 도입
	창업준비비용	휴·겸직 인정기간 확대
공공기관	창업인사규정	창업휴직시 비별도 정원
	창업인사규정 미비 (공공기관 3%만 시행)	별도정원 인정
출연 연구	창업준비비용	기술료 수입을
	지원규정 미비	창업지원금으로 활용 인정
공공기관	창업인사규정	창업 인사규정 미비
	창업인사규정 미비 (공공기관 3%만 시행)	창업 인사규정 제정 유도

- 창업실적 등의 **지표를 대학(LINC\*)·출연 연구(산업기술형)·공공기관 평가에 확대반영\***하여 창업을 권장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 (재정지원 평가)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정성지표 중 창업부문 비중 확대 (예시 : 3%→5%)

(출연 연구 평가) 창업지원규정 신설·개선시 출연 연구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부여 추진(평가지침 개정 완료)

- 대학창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개별사업 수행조직\***을 ‘창업지원단’으로 일원화

\* 창업선도대학(중기부),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기정통부),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교육부)

- 대학·출연 연구의 사업화·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공동 조성하는 **대학창업펀드\*** 규모 확대

\* 정부와 대학이 매칭하여 조성하는 창업투자 프로그램('17년 120억원 → '18년 150억원)

- 청소년·대학생들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중·고교 정규교과\***에 포함하고, **창업선도대학 교육과정에 도입**

\* 시행일정 : ('18.3월) 중1·고1 → ('19.3월) 중2·고2 → ('20.3월) 중3·고3

#### □ 팀창업·재창업·사회적기업 창업 등 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

- 다른 분야·배경 출신 인재들의 **융합형 팀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창업 정책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자금지원시 **우대**

- TIPS·창업선도대학·창업도약패키지 등 **기술창업 지원정책 전반으로 확대 적용**

-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 ('17년) 127(신설) → ('18년) 148

- 동일분야 재창업자도 창업지원법령상 **신규 창업자**와 동일수준으로 **정책지원**(7년 이내 한정)

\* (현행) 폐업 후 동일분야 재창업시 창업범위 대상에서 배제

- 소셜벤처 등 **사회적가치** 기반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內 임팩트(Impact) 투자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설

## ②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 □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

- 벤처기업 확인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집중 지원받도록 선별기능 강화

\* 선배벤처·벤처캐피탈 등 전문가로 민간위원회를 구성

- 대출·보증실적\*에만 근거한 官 중심의 벤처확인 유형 폐지, 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 확대, 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

\* (현행) 기보·중진공에서 대출·보증실적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  
→ 대출·보증유형 90.4%, 벤처투자 3.6%, 연구개발 5.7%(17.7월말)

- 서류작성 등 벤처기업 확인기간 연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현장목소리) "06년에 벤처확인 제도를 바꾸면서, 혁신성·성장성 있는 기업보다 일반 중소기업들이 대거 벤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벤처기업을 키우려면 벤처확인 제도부터 재설계해야 됩니다." (OO 선배벤처인)

### □ TIPS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지원 제도 전반으로 확산하여 창업·벤처정책의 효과성 제고
  -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 '18년부터 우선 적용
  - 기존 창업·벤처정책을 zero-base에서 전수 검토하여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제시하는 '중장기 전환 로드맵' 마련(~'18.上)
-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 창업기업의 투자자·엑셀러레이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TIPS 운영과정에서 기업참여 확대방안 검토

## □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

- 기술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 여신모형\*의 개발·적용 유도('17년 시범적용 → '20년 본격적용)

\* (현행) 현재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분리되어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도 신용평가 등급이 낮으면 은행 대출에 어려움

- 동산담보물의 평가·관리·매각\* 인프라를 구축하여 은행의 동산담보의 관리비용 절감 및 원활한 관리·처분 환경 조성

\* (평가) 은행수요에 맞는 심화된 평가정보 제공  
(관리) ICT를 활용한 자산관리 효율화  
(매각) 실행요건 및 절차 명확화, 캠프·기계거래소 등을 통해 매각 활성화

- 기술력 높은 기업이 투·융자를 연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보에 5,000억원 투자연계보증제도 도입

- 벤처캐피탈협회·모태펀드와 협력\*하여 대상기업을 선정·지원하고, 보증요건·요율·범위 등을 우대\*\*

\* 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벤처캐피탈협회 3자간 업무협약 체결

\*\* 벤처투자자금 50% 이내 보증심사 면제, 0.5%p 보증료 감면, 창업 7년내 전액보증

## ③ 창업 걸림돌·애로·부담 해소 (부담금·조세·입지)

### □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세금부담 경감

-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22년)하고, 면제 부담금 종류·대상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現 12종 → 15종으로 확대  
(2단계 : 업종확대) 現 창업 5년내 제조업 →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17년 세법개정안 등 반영)



구 분	세 목	현 행	개 선
창업기업	재산세	창업 5년內 50% 감면	창업 3년內 : 100% 감면 창업 4~5년 : 50% 감면
	소득세 법인세	창업 5년內 50% 감면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감면 (최대 50%), 신성장서비스업 초기 3년 75%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	취득세	수도권內 중과(3배)	중과 면제(일반과세)

#### □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 · 직장인 ·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22년 350개), 전문랩('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 다양한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 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 아이디어가 사업화 ·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 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 11.2일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방안」 별도 발표

####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 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he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 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 \*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 · 지역기업 · 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 · 자율적 참여 유도

구 분	현 행	개 선
의사결정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지원체계	대기업 경직적 매칭 (일방지원)	중견 · 벤처, 대학 등 자율참여 (상생협력)
지자체 참여	자율적 참여 부족	적극적 참여 · 협력
센터 기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	초기창업 + 투자기능 집중, 센터별 특화

#### □ 판교밸리 조성과 국유재산 · 공공기관을 활용한 혁신창업 공간 확충

- 현재 진행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지원 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고수준의 혁신모델로 선도개발
    - \* 43만m<sup>2</sup> 규모, 창업초기 · 벤처기업 1,000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입주 기대
  - 판교밸리의 조성 ·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지방 도시첨단산업 단지(11개)를 대상으로 판교모델 확산 추진계획 수립
- ※ 11월중 「(가칭)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 · 발표
-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 · 활용을 통해 창업기반 확충 지원
    - 도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시 일정부분을 벤처집적시설 ·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할당

- 창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유건물 대부료를 감면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식재산 사용료 면제 추진
-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혁신기업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기업에 기술·설비·자금 등 지원
  - 입주기업 보유기술 구입을 통해 공공기관 업무혁신\*에 활용
- \* (수자원공사) '18년부터 공사 시설(댐, 정수장 등)을 민간에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개발된 기술을 구입 또는 해외수출 등 판로지원 실시
-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면서 도심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46개) 추진시 창업집적공간 조성
- \* (예시) 서울시 종로세운상가 도시재생 → 17개 청년창업팀 입주 등 창업공간 조성

#### □ 법률·세무·노무·지적재산권 애로지원을 위한 Support Hub 구축

- 혁신센터·TIPS 타운 등을 중심으로 노무·세무·법률 등 창업자의 경영상 실무 애로지원 창구를 확충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지식재산권화를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고품질 지식재산권 컨설팅 제공
- \* '18년 지원목표(건) : (예비창업자) 930, (창업기업) 420

#### ④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

##### ◇ 죽음의 계곡과 J-Curve 효과

- ❶ 초기기업은 창업 이후 3~5년에 사업실패율 급증('죽음의 계곡')
  - \* 창업 후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양산·사업화 단계에서 자금·판로부족에 직면
  - \*\* 창업 5년 후 생존율('14년) : (獨) 41.0, (英) 37.5, (韓) 27.3
- ❷ 죽음의 계곡 극복 후 본격성장 단계에서 일자리창출 등 (+) 효과 극대화('J-curve')
  - \* 전체 1%에 불과한 scale-up 기업이 고용·경제성장의 68%, 36% 기여(英)
- ❸ 그간의 정부 정책지원은 대부분 초기 창업단계에 집중
  - \* 창업단계별 예산비중('17년) : 창업준비 5%, 창업초기 62%, 창업도약 30%

#### □ 창업기업 성장단계 도약을 위한 패키지 지원 확대

-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조기 확대
  - \* 사업모델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R&D 등을 최대 2년간 1억원 지원
-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업당 지원금액을 2배 확대\*하고,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 집중지원\*\*
  - \* 지원기간 및 금액 : (현행) 최대 2년, 1억원 → (개선) 최대 2년, 2억원
  - \*\* 고부가기술 분야 지원비중(%) : ('17년) 15 → ('18년) 50 → ('20년) 70

####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혁신형 조달제도 도입

- 초기 창업기업의 조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계약 (2.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전환
  - \* (현행) 일정금액 이상의 조달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소규모 계약에도 적용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 \*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EU·英 등에서 운용중
  - ※ 11월중 「혁신성장·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별도 발표

#### □ 민간 유통채널 등의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판로확보 지원

- 정부 판로지원 사업체계를 온·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업효과성 제고
  - \* '18년중 판로지원 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성과평가 후 전면도입



※ **민간유통망 중심의 판로지원 사업**

- 온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이 자체 유통망에 판매할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직접 **심사·선정·판매**(판매망 제공)
- \* (현행) 기업들이 판로지원 사업 신청 → 공공기관이 심사 →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정부 **판로지원금**은 실제 판매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유통채널에 직접 지급**

- 공영홈쇼핑의 혁신제품 방송시간을 **20%까지 확대**(現 16.7%)하고,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 플랫폼** 구축·운영

\* 혁신제품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상거래(전세계 시장규모 2.1조원)

□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

- TIPS를 통해 발굴된 혁신창업 기업(5년간 1,000개) 중 혁신성·성장성 높은 **20개 우수기업**을 매년 별도 선발·육성

- 양산 등 대규모 자금 필요시점에 최대 **45억원**까지 집중지원

\* 중진공에 민간투자연계 융자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기보 보증 연계

- 글로벌 **벤처캐피털**을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외자유치펀드**(現 1.4조원) 추가 조성

-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을 창업기업 중심으로 일부를 개편하여 창업·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12개국 21개소)된 인큐베이터 시설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사무공간, 마케팅·법률 전문컨설팅 등을 지원(중진공 운영)

- 부처별로 분산된 창업·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지원기관간 연계\***를 통해 일괄(one-roof) 서비스 제공

\* 창업진흥원(중기부, 기업선발) → KIC(과기정통부, 공간제공) → KVIC(중기부, 자금제공)

- 전세계 스타트업·투자자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창업 박람회** 및 **창업경진대회**를 **국제행사로 확대**

☞ **(현장목소리)** “현재 벤처정책은 국내 창업기업 위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지원이 절실합니다.” (OO 벤처기업 대표)

## 2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 **재정·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붐 확산**

### ① 혁신기업 지원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발표

### □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추가 조성**

- 주요국 수준\*으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혁신모험펀드 조성·투자시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15년 기준)에서 '20~'22년 중 0.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15년 기준 美 0.33%, 中 0.24%)

- 혁신모험펀드는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에 따라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

-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①**펀드 회수재원**·②**재정**·③**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

- 혁신모험펀드는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을 강화**하고, 모태·성장사다리 등 공공펀드간 **운영·투자 연계 강화**

### □ **혁신모험펀드와 연계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 마련**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연계 추진

\* 신·기보 등의 보증 공급과 무보증 대출을 병행, 보증공급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에서 추가 출연 추진

-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 등에 **M&A·사업재편·외부기술 도입(buy R&D)·설비투자** 등 대규모자금 필요시점에 자금공급

## □ 모태펀드의 국정과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지방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 피투자기업의 고용성과에 비례한 성과보수 제도 도입 추진
  - **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단계별**로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인장치를 마련
- \* (결성단계) 지역기업 투자비중을 높게 제안하는 운용사에 모태펀드 우선 출자 (투자단계) 펀드 조성액의 일정비중을 지역기업 투자 의무화 (회수단계) 지방투자 손실 발생시 모태펀드가 손실금 일부를 우선 충당
- 혁신기업, 대학·출연연,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의 신기술 분야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사업화 전용펀드** 신설

## ② 일반국민·근로자의 벤처투자 환경 개선

### □ 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 은퇴자·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 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

현 행		개 선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000만원	50%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 \* (현행) 투자시점에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 (개선)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 □ 혁신적 아이디어 기업의 클라우드펀딩 활용기회 확대

-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발행한도를 완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
-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클라우드 펀딩을 모두 허용
-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現 7억원)를 소액공모 한도 (現 10억원) 확대와 연계하여 **상향 검토**
- 클라우드펀딩 투자한도·전매제한·광고 등 분야의 **완화된 규제\***를 현장에 적용(9.28일 자본시장법 개정)
- \* (투자한도) 기업당 年 200→500만원, 총 年 500→1,000만원 (전매제한) 1년→6개월 / (광고) 인터넷포털 등 광고허용
- 창업 7년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펀딩 투자금도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 우리사주·스톡옵션에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창업자-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 공유 권선틱을 실시**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현행) 400만원 소득공제 → (확대)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 인정
- **핵심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현장목소리)** “2000년대 초반 벤처 붐 당시 스톡옵션 혜택은 우수인재들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견벤처도 인재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OO 벤처기업 회장)

## □ 일반인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 일반국민들도 소액으로 손쉽게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 정비

\* (현행)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50인 미만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방식으로만 결성 가능 → 일반국민들의 참여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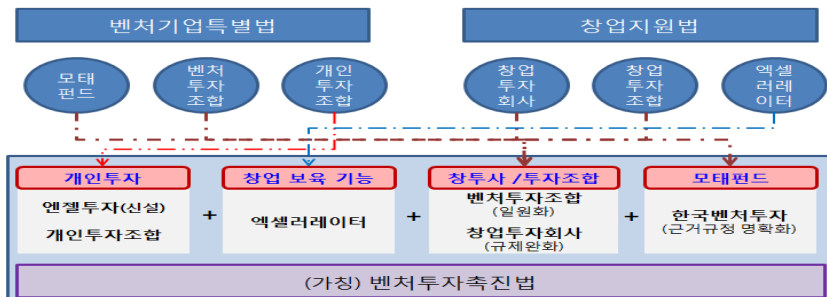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 조합결성·업무집행·해산 등 조합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투자자보호 규정 마련
- 현행 창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출자금 소득공제)을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동일하게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창투조합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출자금 소득공제) 개인이 창투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 ③ 벤처캐피탈 진입·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 □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同一행위·同一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 벤처법·창업법에 분산된 투자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통합
-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민간주도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최소화
- 국내 벤처투자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주기적인 통합적 통계생산 의무화



##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자유로운 진입·투자를 위한 규제혁신

(★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중점 추진)

-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창투자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10.17일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선
자본금 요건	50억원	20억원
전문인력 자격요건	국가 자격증, 학위 소지자	창업·투자 경험

(현장목소리) “미국은 오래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고 창업경험을 가진 투자자가 많은 반면, 한국은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등의 룰이 있어요. 그래서 경력만으로 한국에서 VC 만들기 힘들어요.” (OO 엑셀러레이터 상무)

-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이 자유롭게 자금운용·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범위·방식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

- (투자대상) 일률적·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 등 의무투자비중(40%)을 창업투자회사 규모별로 차등화
- (투자범위) 사회통념에 벗어난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하고 **전 업종에 벤처투자 허용**(현재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투자 제한)
- (해외투자) 창투사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

\* (현행) 국내 창업기업 등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선투자한 후에만 해외투자 가능

- (투자방식) 다양하고 혁신적인 투자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예시 : SAFE\*) 허용 검토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형태 투자방식

- 현재 개인투자조합 결성만 가능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포함) **결성\***을 허용

\* (현행)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만 결성 가능

### 3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투자→회수→재투자”를 위해 코스닥·M&A 시장 활성화,  
“창업→실패→재도전”을 위해 안전망 확충·재기지원 강화

#### ① 코스닥 등 회수시장 경쟁력 제고

※ 12월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별도 발표

#### □ 코스닥·코넥스·K-OTC 시장기능 회복·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 【코스닥】

-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경쟁 촉진
  - \* (예시) 코스피·코스닥·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을 상향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
-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관행 재정비\*
  - \* (예시) 테슬라요건 적용실적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 풋백옵션(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3개월간 공모가의 90% 보장)을 완화하는 방안 등
-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 및 공시 확대
  - \* (예시) 과거 5년간 대규모 횡령·배임, 회계분식 등이 발생하였거나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상장 제한
-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R&D 비용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現 최대 30%)

##### 【코넥스】

- 코넥스시장이 기업들의 성장자금 조달채널로 기능하기 위한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20억원) 등 제도 개선 추진

##### 【K-OTC】

-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K-OTC에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시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

#### ※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활성화 방안

-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의 요건 폐지,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확대
- 협의거래, 경매 등 매매방식을 다양화
- 거래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 펀드 참여 유도

#### □ 연기금과 대형 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

-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 등을 통해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예시 : 10%) 확대 유도
  - \* 연기금의 투자수익률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현재 연기금의 벤치마크 지수는 “KOSPI 200” 중심으로 구성
- 연기금 투자자의 코스닥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 평가배점(現 5점/총 100점) 확대 검토
  - \* 기금운용 성과 등을 종합평가 → 평가결과 우수시 경영평가 가점 등 부여
- 초대형 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 및 자본규제 정비 등을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

#### ②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 □ M&A를 저해하는 기술·인력탈취 제재 강화

- 기술탈취가 M&A보다 쉽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의 대폭 확대 검토
  - \* (현행)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개선)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
- 대기업 등의 기술유용 행위 억제를 위해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선제적 직권조사 강화

## □ 대기업 등의 M&A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 대기업의 M&A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3년→7년)
- 중견·대기업 등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 (현행) 인수·합병대가로 50%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 → (개선) 삭제
- 혁신형 M&A를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검토

## □ 해외자본의 국내 M&A 시장 참여 지원

- 중국 등 해외 VC와 국내 스타트업간 정례적 만남의 장 제공
- \* 한·중 합작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국 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 국내 스타트업 미디어,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M&A 매물 정보를 확보, 해외투자정보망(CrunchBase 등)에 적시 제공

## ③ 재도전·재창업 지원 안전망 강화

## □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으로 사업실패 부담 완화

-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를 폐지(18.上)하되, 도덕적해이 방지 보완책 병행
- 책임경영지표\*를 도입하여 보증심사시 활용하고, 주기적 사후 관리를 통해 법인 대표자의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유도
- \* 법인과 대표자간 자산 등의 명확한 분리,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검증, 경영투명성 확보 여부 등
- 민간금융권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협약체결 추진
- \* (예시) 신·기보가 제공한 80% 부분보증서 대출인 경우, 은행의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

## □ 사업실패시 자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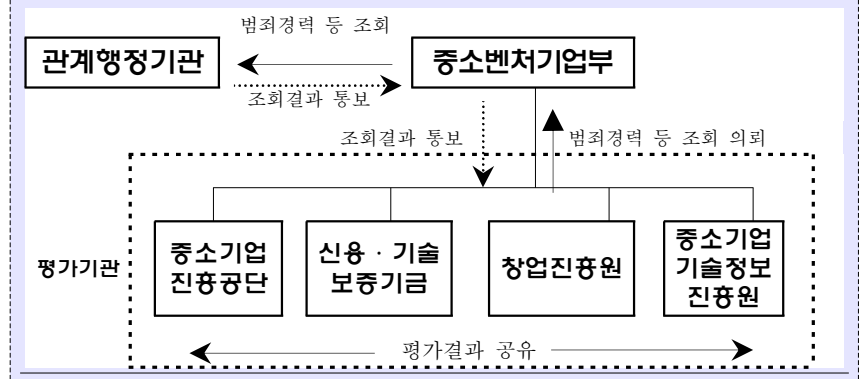
-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최저생계 등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완화
- \* (현행) 개인파산시 주택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 900만원(월 150만원 × 6개월)을 제외한 모든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 → (개선) 1,080만원으로 상향(월 180만원)
- 재기사업자\*의 경우, 연체·채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회사간 공유 및 개인신용등급 반영을 제한하여 신용회복 지원
- \* 신·기보,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사업 대상자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취업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소액채납 납부의무 면제제도 한시시행(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

- 재도전·재창업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대상 확대(10.31일 규정 개정)

### ※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요

-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인이 이전에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



-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법령위반 경중 및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성실경영평가에 탈락하였으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절차** 보장
- **5개 평가기관\*** 중 하나에서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 효력을 인정**하여 사업신청시마다 평가를 받던 **불편함** 해소

\* 중진공, 신보, 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현 행	개 선
경영 및 노동관련 법령위반 여부 확인기간	재창업 前 전체 기간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경과시 평가에 미반영 * 벌금형·집행유예: 5년 징역·금고 3년 미만: 10년 징역·금고 3년 이상: 15년
이의제기에 따른 처리방법	담당자가 판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정상참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정상참작 기준	평가기관별 상이	단일기준 마련 * ①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여부, ②재범 여부, ③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
평가결과 유효기간	기준 없음	최대 2년 (평가 후 다음연도 말일까지)

○ **재기기업인 조세특례제도**(채납처분·징수유예)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성실경영 평가통과자**를 추가('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재기기업인 조세특례 **채납액 기준**을 **상향 조정**(3→5천만원)

○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 조기 결성·집행, TIPS 방식의 민관 합동 **제도전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재창업 지원기회 확대

\* (일정) 재기지원펀드 '17년말까지 결성완료,  
(대상) 폐업 사업주 등에 대해 60% 이상 투자

○ **사업정리·채무조정·재창업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전 종합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하여 체계적 제도전 지원

\* (현행) 서울(2개)·부산·인천·대구·광주 등 9개 센터 운영중

## IV. 추진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① <b>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b>			
1-1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	'17.下	중기부
1-2	모기업의 사내벤처·분사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7.下	기재부 동반위
1-3	대학·출연·공공기관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	'18.上	교육부 과기부 기재부
1-4	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18.上	중기부
1-5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	'18.上	중기부
1-6	TIPS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 확대	'18.上	중기부
1-7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	'18.上	중기부 금융위
1-8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확대	'18.下	중기부
1-9	초기 창업기업·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17.下	기재부 행안부
1-10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18.上	중기부
1-11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재설계	'17.下	중기부
1-12	판교창조경제밸리(명칭 공모중)를 혁신모델로 선도개발	'17.下	국토부 기재부
1-13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을 통한 창업기반 확충	'17.下	기재부
1-14	혁신도시 공공기관내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 지원	'18.上	기재부
1-15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2배 확대	'18.下	중기부
1-16	혁신형 조달제도 도입	'17.下	기재부 조달청
1-17	창업기업 판로확보 지원	'18.下	중기부
1-18	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	'18.上	중기부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	------	----	----

## 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2-1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신설	'17.下	중기부 금융위
2-2	혁신모험펀드 연계형 대출프로그램 마련	'17.下	중기부 금융위
2-3	모태펀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18.上	중기부
2-4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17.下	기재부
2-5	클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및 세제혜택 부여	'17.下	금융위 기재부
2-6	우리스주·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17.下	기재부
2-7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 정비	'18.下	중기부
2-8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18.上	중기부
2-9	창업투자회사 규제 혁신	'18.上	중기부

## ③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3-1	코스닥·코넥스·KOTC 제도 정비 및 세제지원	'17.下	금융위
3-2	연기금·대형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	'17.下	금융위
3-3	기술·인력탈취 제재 강화	'18.上	중기부 공정위
3-4	대기업의 M&A참여 인센티브 확대	'17.下	중기부 기재부 동반위
3-5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	'17.下~	금융위 중기부
3-6	사업실패시 재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	'17.下~ '18.下	법무부 금융위 기재부
3-7	성실실패자 기준 완화 및 조세특례 확대	'17.下	중기부
3-8	TIPS방식의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	'17.下	중기부